

지역균열은 어떻게 균열되는가? :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이념·세대의 상호작용

허석재 | 국회입법조사처*

| 국문요약 |

이 글은 2007년, 2012년, 2017년 대통령 선거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이념과 세대가 지역주의와 빚어내는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영남블럭에서 이완되는 현상을 반영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살펴보았다. 지역주의의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념과 세대요인과 비교하여 투표선택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우리는 삼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주의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의 오류를 지적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울산·경남은 대구·경북에 비해 진보성향 후보에 대해 좀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념투표와 세대투표의 경향은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에 영남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이념 성향간 투표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왔다. 영남지역에서 세대 간 투표선택의 차이가 2012년에 크게 강화되었지만, 2017년에는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호남에서는 이념에 따른 투표가 덜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2017년에 들어서는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제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주제어 | 지역주의 투표, 이념과 세대, 비선형 모형, 상호작용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 서론

이 글은 한국 선거정치의 지배적인 균열구조인 지역주의의 변화에 대해서 다룬다. 구체적으로 말해, 지역주의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할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이념과 세대 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한국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는 지역균열이 침식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였다. 진보성향의 영남(부산) 출신 노무현이 호남 기반의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지역주의에 상당한 이완이 발생하는 한편 이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다. 노사모를 중심으로 386세대 및 인터넷 세대가 노무현의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어줌에 따라 세대 또한 지역균열을 대체할 갈등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주의가 약화하고 있는가 견제한가를 검증하고, 지역주의와 비교하여 세대와 이념 요인이 강한지 약한지를 검토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세 요인의 상호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주로 지역과 이념이 교차하는가 중첩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가령 호남민은 본래 진보성향이 강하므로 호남에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선택되는 것은 지역과 이념이 중첩된 결과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백준기 외 2003, 문우진 2005, 2009), 지역에 따른 이념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시되었다(이갑윤 1998, 강원택 2002).

이후 정치·사회적인 민주화와 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되면서 유권자들의 자기 이념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지역과 이념만이 중첩된 게 아니라 세대와 이념도 중첩돼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호남이 진보적이고 영남이 보수적일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이고 노년 세대일수록 보수적이다. 이렇게 지역과 이념, 세대 간에는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삼자 간의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

다(Kim et al. 2008). 지배적인 균열로서 지역주의에 균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른 균열과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독립적으로 따져서는 알기 어렵다. 지역과 이념, 세대 간의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가령, 모든 지역에서 세대투표, 이념투표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투표행태가 지역마다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한다. 이 글은 지역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개별 선거 이후 지역주의의 양상을 관찰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최근의 3차례 대선을 함께 분석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과 이념·세대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도 기존 연구들은 모형설정에 있어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3번의 대선을 통해서 지역주의에 대해 이념과 세대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셋째, 종전의 지역주의 접근은 영·호남 간 갈등구조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우리는 영남을 하나의 블록이 아니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나누어 분석한다. 지역주의가 민주화 이후 첨예해진 균열이고, 1990년 3당 합당 이전까지 부산·경남 지역이 야권의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부산·경남 지역에서 진보개혁 정당의 지지세가 확대돼 온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치러진 3번의 대선을 통해서 볼 때, 집합적 수준에서 영·호남의 투표분할은 줄어들었지만, 지역주의 투표는 일관되게 약화된 게 아니라 등락하고 있다. 하지만 영남지방에서 세대투표와 이념투표의 경향이 강화되며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위축시키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투표패턴은 대구·경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영남지역에서 2007년에 비해 2012년에는 세대투표 경향이 매우 강해졌고, 2017년에는 이념투표 경향이 한결 강해졌다. 호남에서는 2007년 선거에서 세대투표 경향이 나타났지만, 이후 선거에서는 영남에 비해 세대투표와 이념투표가 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의 경우, 호남 출신자 가운데 노령의 보수 성향 유권자라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확률이 60%에 달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지역주의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의 분석대상과 시기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지는 절에서 우리의 자료를 통해서 이념과 세대, 지역이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서술적으로 살펴본다. 다음 절에서는 로짓분석을 하고 있는데, 종속변수의 특성상 나타나게 되는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로부터 분석전략을 이끌어 낸다. 각 연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세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발견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지역주의의 의미와 분석대상

1. 지역주의 투표의 개념

지역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정치의 지배적인 투표행태이다. 지역주의에 대한 여러 입장에 대해 박상훈(2009, 167-8)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접근 방식으로 나눈다. ① 전통 사회의 증후군으로 지방주의 혹은 전근대적 연고주의, ② 지역개발을 추구하는 물질적 인센티브, ③ 중심-주변부 차원에서 영남의 기득권과 호남의 저항의식의 발현, ④ 지역 공동체에 대한 문화적 정체감, ⑤ 호남 차별과 배제의 기득권 의식으로 반공주의 및 반급진주의와 결합된 지배 이데올로기.

각각의 입장은 지역주의의 기원과 발현형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보여주지만, 투표동기가 무엇이었던 투표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고유의 요소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과 ④는 귀속집단으로서 지역의 고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③과 ⑤는 기득권 구조에 의한 차별과 배제

가 이뤄지면서 형성된 이념적 요소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 ②는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나는 경제투표의 일환이므로 영남과 호남 사이 혹은 호남과 비호남 사이의 대결구조를 특징으로 ‘지역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우진(2005)은 ‘애향심, 고향 출신 정치인(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 특정 지역민에 대한 거부감, 지역적 문제의 중시성향 같은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지역주의 투표’라고 하고, 지역별로 큰 편차가 나는 집합적 선거결과인 ‘지역분할투표’와 구별한다. 여러 연구들이 집계 수준에서 나타나는 지역분할적 투표의 결과를 통해서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어, 정준표 2015, 정재도·이재묵 2018),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역분할적 투표 결과는 지역주의에 따른 투표와는 구별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역분할투표가 강화되더라도 지역주의 투표는 그대로이거나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글에서 문우진(2017)은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를 ‘순수한 지역주의’라고 부르는데, 지역분할투표가 약화되더라도 지역주의는 약화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영남 유권자가 호남 유권자에 비해 이념성향이 더 보수적이라고 가정할 때, 영남(호남) 유권자가 더 진보적(보수적)이 되면, 이들이 자신의 지역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의와 이념적 구성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지역분할적 선거결과는 변할 수가 있는데, 유권자들이 종전에 비해 소속 지역보다 이념에 따라 투표결정을 더 많이 한다면, 지역분할적 투표결과는 변할 수 있다.

2. 지역주의에서 지역의 단위와 분석 대상

이러한 지역주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의 거주지와 출신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있다. 이갑윤(1998, 87)이 지적하듯이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관된 것인가 혹은 출신지역과 연결된 연고주의에 기인하는 것인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독립변수로서 출신지가 적실하다는 의견

이 있는가 하면(이갑윤 1998, 2002; 김성모 · 이현우 2015), 거주지 효과가 훨씬 크다는 반론도 있다(Moon 2005; 문우진 2017). 기존 연구들은 어느 편이 옳은지에 대해 자료분석을 통해 가려내려고 시도해 왔다. 가령 투표선택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서 거주지와 출신지를 각각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 가운데, 어느 편이 더 많은 영향력과 설명력을 갖느냐로 판별하기도 하고, 양자를 모두 방정식의 우변에 넣어서 영향력을 비교해 보기도 했으며, (양자의 공선성 문제 때문에) 출신지/거주지의 여러 조합을 상호비교하기도 하였다. 경험연구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들이지만, 투표선택을 더 잘 설명하는 변수의 조작화가 관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개념화한 지역주의를 측정하는데 무엇이 타당한(valid) 척도인가가 더 중요하다. 지역주의를 거주지와 출신지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다.

거주지로 보는 시각들은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지역주의를 낳으므로, 출신지가 어디든 지금 사는 거주지에 기반 한 투표결정이 더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영남의 기득권과 호남에 대한 차별에서 배태된 것으로, 양 지역에서 (출신지역이든 거주지역이든) 특정 정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난다. 만일 거주지역의 경제적 혜택을 바라는 것이라면 모든 지역마다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효과로 양당제가 자리잡아 양대 정당이 영·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개발 공약을 제시하며 경쟁하는 것을 지역주의라고 부른다면, 영남 기득권과 호남 배제에서 배태된 지역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가 된다. 그것은 그저 정당 간에 득표극대화를 위해 물질적 유인을 약속하는 매우 일반적인 자원배분의 정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과 같은 지역균열로 나타나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물질적 이익에 대한 기대와 귀속집단에 대한 애착(혹은 타집단에 대한 배척)은 서로 결부돼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신지역의 소외가 지역주의의 동기가 되었다면, 지역개발을 통해 보상받고자 할 것이다. 즉, 경제 투표인 동시에 정체성 투표가 작동하며, 이 둘을 경험적으로 가려내기는 어렵다. 출신지와 거주

지가 같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양자가 다른 사람은 출신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현재 거주지의 물질적 혜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출신지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의석이 지역구인 상황에서 지역개발 공약이 주를 이루고 각 후보자 간의 입장도 수렴되기 마련이다. 어느 지역구에 도로를 내자는데, 누구는 찬성하고 반대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한 거주지 효과를 지역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역주의로 인해 정당별 강세와 약세지역이 뚜렷한 상황에서 타 지역 출신 거주자에게는 출신지에 따른 지역주의적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출하기가 어렵다. 가령 영남 출신 호남 거주자는 현재의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자기 선거구에 지지정당의 유력한 후보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기권하거나 차선을 선택하는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된다. 거주지 요인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총선 사례를 분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관심 갖는 (순수한) ‘지역주의’는 지역 정체성이며 지역개발에 대한 합리적 기대나 지역민의 이념 및 세대 구성 등 지역 외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므로, 출신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유권자들이 이러한 선호를 표현하기에 전국 단위의 대통령 선거가 더 적절하다.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는 또 다른 이유는 대선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선거(first-order election)이기 때문이다. 장기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몇몇 연구를 보면, 대선과 총선 자료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문우진 2016, 2017). 이러한 접근은 지역균열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지만, 동시에 오류의 여지도 있다. 비동시선거(non-concurrent election) 주기를 가진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간에 치러지는 의회선거는 현직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반응으로 유권자의 투표선택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미국 정치에서 정립된 (집권당의) 중간선거 패배(midterm loss)의 법칙에서 보듯이, 집권당에 대해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주의, 이념 및 세대 간 차이

에 대해 대선과 그것에 이어지는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를 등가로 보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는 대선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거이고, 그렇기에 대선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줄지언정 다른 선거로부터 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대선끼리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¹⁾ 게다가 결선투표제가 없는 전국단위 선거의 특성상 양자 간 대결로 압축되기에 이념과 세대에 따른 상호작용을 보기에 적절하다. 지역주의를 ‘충청 지역주의’, ‘강원 지역주의’ 등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것으로 개념을 확장하는 오류도 대선의 경우에는 제어될 수 있다.

우리가 2007년, 2012년, 2017년의 대선 사례를 비교하는 다른 이유는 자료상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매 대선마다 조사해온 한국선거패널조사(KEPS: Korean Election Panel Studies)를 활용한다. 한국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 이전에도 여러 기관이 많이 시행해 왔지만, 문항과 조사방법에 있어서 일관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같은 기관이 주관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의뢰한 기관이 달라지거나 조사자의 역량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KEPS 자료는 상대적으로 역사는 짧으나, 주요 문항과 조사기관 및 조사방법이 동일하다. 더불어 대선 사후 설문조사들이 대부분 승자에 대한 편향으로 인해 실제 후보별 득표에 비해 당선자에 대한 투표비율이 과다측정되는 문제가 늘 있다(Beasley and Joslyn 2001). 이는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많은 문항을 물어봐야 하는 면접조사의 특성상 선거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설문이 종료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KEPS는 전화조사 방식을 쓰며 패널조사이므로 선거 전후 설문을 나누어 함으로써 문항을 확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선거결과와 근사한 조사결과를 도출해 왔다. 투표선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실제 투표결과와 근사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다.²⁾

1) 참고로 문우진(2016, 45)은 대립하는 지역과 세대의 이념 격차가 대선에서는 줄어들다가 다음 대선 직전 총선에서 주기적으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패턴이 각급 선거 간에 일어나는 영향관계를 방증한다.

2) KEPS 자료는 2006년에 첫 조사가 시행되어 2002년 대선 조사는 없다. 선거연구에 자주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주의를 영·호남 간 갈등구조로 파악하던 종전의 접근과 달리 영남에 대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을 분리해서 분석한다. 지역주의는 민주화 이후 현저해진 균열이며, 민주화 정초 선거였던 1987년 대선에서 대구·경북의 기득권 구조를 대표하던 노태우와 부산·경남의 김영삼, 광주·전라의 김대중이 대결하면서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 3당 합당 이전까지 <민주 vs. 반민주> 구도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같은 블럭에 속했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부산·경남은 야도(野道)를 형성했다. 특히 군부 권위주의에서 이른바 ‘TK(대구경북) 헤게모니’에 대해 다른 지역들은 소외감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Kwon 2004). 3당 합당 이후 보수블럭의 일부였던 부산·경남 지역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차츰 영남의 보수블럭에서 이완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영남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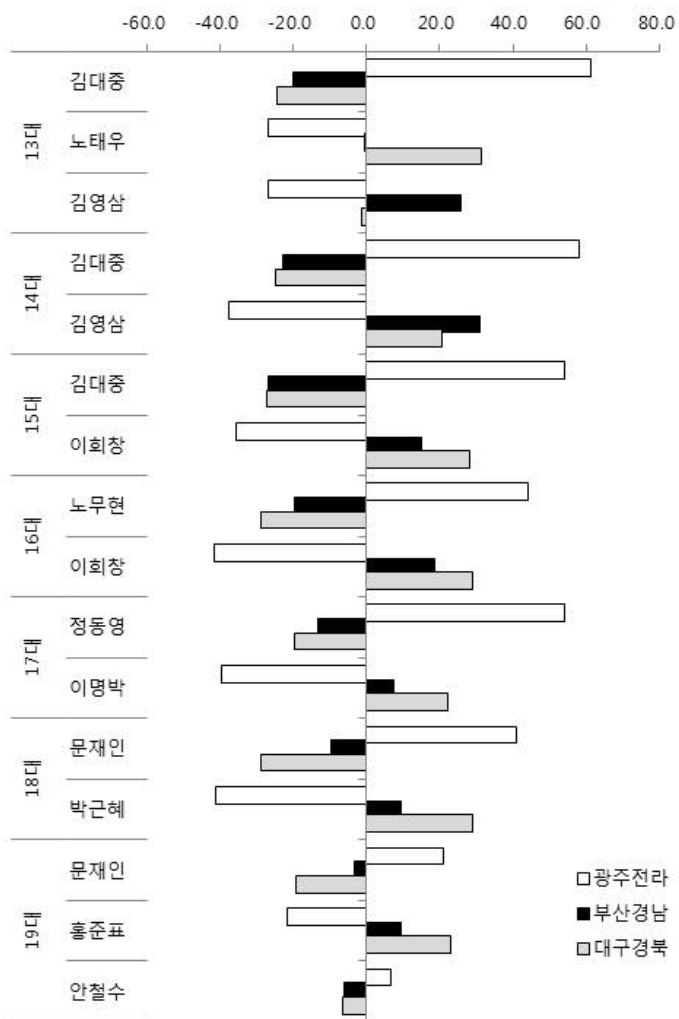
Ⅲ. 지역주의와 이념·세대의 변화양상

<그림 1>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지역적 강세와 약세를 보여준다. 제13대 이후 모든 대선에서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만을 대상으로 광주·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별로 나누어 보았다. 각 후보가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에서 각 지역별 득표율을 뺀 값(vote margin)이다(문우진 2009). 막대가 우측으로 길수록 해당 지역에서 강세이고, 좌측으로 길수록 약세를 의미한다. 각 선거에서 막대가 좌우로 길게 뻗어 있을수록 후보별로 특정 지역에서 강하고 특정 지역에서 약하다는 뜻이며, 반대로 0점 근처에서 모여 있다면 지역별 득표

활용되는 다른 자료로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선거 시마다 시행해온 조사가 있는데, 2002년 대선의 경우 출신지 문항에서 ‘경상’지역으로 한 데 묶어서 보기를 제시하는 바람에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나누어 볼 수가 없다.

율이 고르다는 뜻이 된다.

보다시피 지난 30년간 양측으로 뺏은 막대는 점차 작아지는 추세이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전국 평균 득표율에 비해 광주·전라 지역에서 61.4%p를 더 얻었고, 다음 번 14대 대선에서도 이 수치는 58.1%p에 이른다. 반면,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평균 득표율에 비해 20.9%p를 더 얻었다. 보수정당의 후보를 보면 강세지역인 대구·경북에서 13대 노태우 후보 31.5%p, 14대 김영삼 후보 20.6%p, 15대 이회창 후보 28.2%p였다. 반면,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23.0%p를 더 얻었다.



〈그림 1〉 역대 대선 후보의 지역별 득표력(지역득표율-전국득표율,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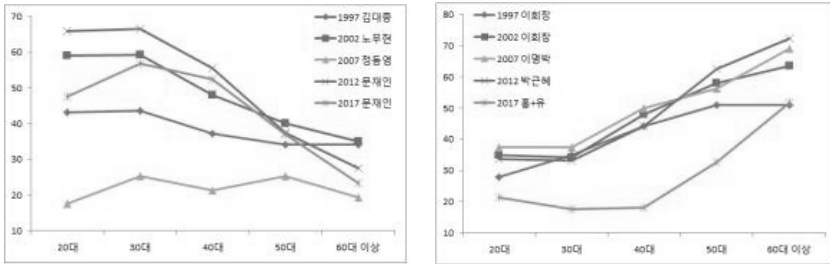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실 광주·전라, 대구·경북 지역의 강세와 약세가 일관되게 줄어든 건 아니다. 막대길이가 갈수록 줄어든 것은 부산·(울산)·경남³⁾ 지역이다. 김영삼은 13대 선거에서 25.6%p를 더 얻었고, 14대에는 그 규모가 30.9%p나 됐지만, 김영삼의 퇴장 이후 이회창 후보는 부산·경남에서 15.1%p, 18.8%p의 추가 득표를 하는데 그쳤다. 이후 17대 이명박 7.5%p, 18대 박근혜 9.6%p, 19대 홍준표 9.5%p를 더 얻었다. 1990년 3당 합당과 함께 보수블럭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이지만, 김영삼의 퇴장과 부산 출신 민주당 후보의 연이은 등장으로 영남지역 블럭이 이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집계된 결과만 갖고서는 지역주의 투표의 증감을 판단하기 어렵다. ‘순수한 지역주의’는 이념, 계층, 세대 등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제한 나머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념이나 세대에 따른 투표선택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그림 2>는 양대 정당이 공천한 후보들의 연령대별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왼쪽 세모꼴)를 제외하면 연령대에 따른 투표선택의 차이는 점차 뚜렷해져 왔다.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를 보면 1997년 김대중이 60대 이상에 비해 20대에서 9%p를 더 얻었지만, 이 수치가 2002년 노무현, 2017년 문재인은 24%p에 달하며, 2012년 문재인은 무려 38%p나 더 득표했다.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을 보면 연령대에 따른 지지패턴이 더욱 뚜렷해서, 20대와 60대 이상 간의 득표격차는 23%p(1997년)~38%p(2012년) 사이로 늘 높게 유지돼 왔다.

3) 울산이 광역시로 출범한 것은 1997년 7월이다. 15대 대선 이전까지는 경상남도도 소속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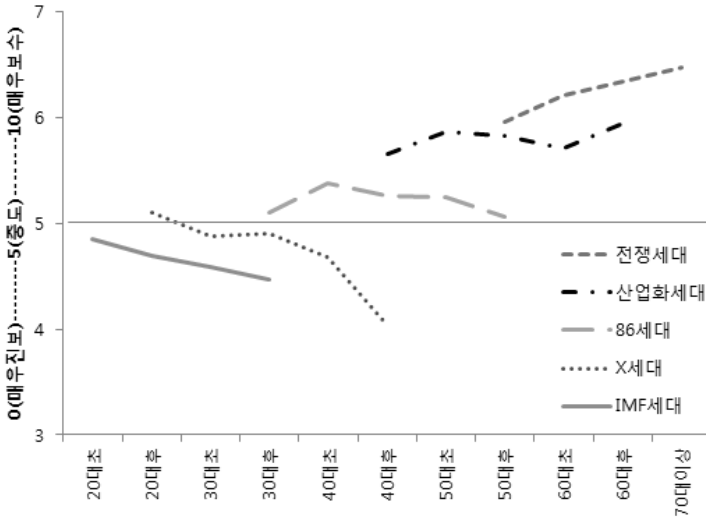


〈그림 2〉 진보·보수 성향 후보의 연령대별 지지율

주: 1997년은 60대에 대한 별도 구획이 없어, ‘50대 이상’의 값으로 대체함. 2017년은 70대 이상을 별도로 조사하였지만, 60대와 평균을 내서 60대 이상에 적용.
 ‘2017 홍+유’는 ‘홍준표+유승민’
 자료: 1997년은 한국갤럽조사, 나머지는 방송사 출구조사.

엄밀히 말해서 연령(age)과 세대(cohort, generation)는 다른 개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령은 변하지만 생년으로 확정된 세대는 변하지 않는다. 대체로 사람은 나이 들며 보수화한다.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유하는 세대경험에 따라 보수화 정도가 다르며, 이를 세대효과(cohort effect)라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났듯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온 세대투표 경향은 전체적으로 연령효과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세대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KEPS 자료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세대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수는 있다. <그림 3>은 지난 10년간 KEPS 자료를 결합하여 세대별로 나이 들며 주관적 이념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다.⁴⁾

4)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므로, 5세 단위로 세대를 끊어서 5년 사이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세대분류는 1950년 이전=‘전쟁세대’, 1951-60년생=‘산업화세대’, 1961-70년생=‘86세대’, 1971-80년생=‘X세대’, 1981년 이후=‘IMF세대’로 하였다. 주관적 이념은 매우 진보(0)~매우 보수(10)의 11점 척도의 평균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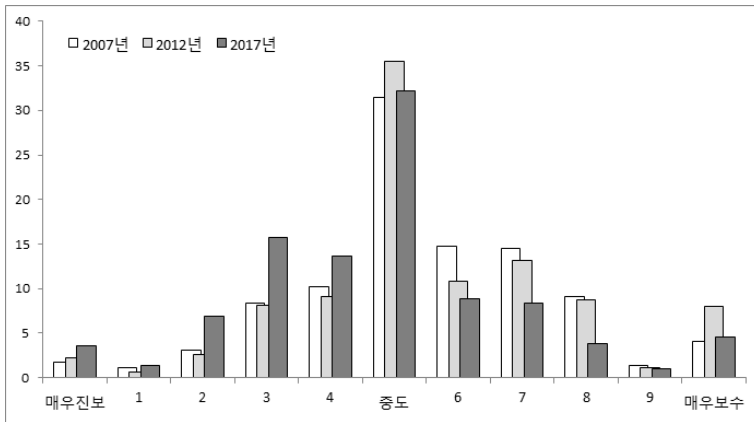
〈그림 3〉 세대별 연령증가에 따른 이념변화 (07-17년)

주: 주관적 이념은 매우 진보(0)-매우 보수(10)의 11점 척도
 자료: KEPS 2007-2017

86세대는 연령상 30대 말에서 50대에 이르도록 중도(5) 근처에서 큰 변화가 없다. 86세대를 중심으로 윗세대는 나이 들며 보수화되는 추세가 뚜렷한 반면, 아랫세대는 오히려 진보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러한 세대 내 이념변화가 세대 간 이념격차와 지지행태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주기상 86세대와 그 아랫세대는 아직 노령화 과정을 겪기 전이다. 이들 세대의 이념성향이 어떻게 변해갈 지에 따라 여러 정치세력의 선거 전망이 달라질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승패는 유권자의 이념분포 양상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전반적인 이념 분포가 진보로 기울어 있다면, 진보성향 정당에 유리한 것이다. <그림 4>는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이념분포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2012년까지 보수 쪽에 더 많은 유권자가 포진하고 있는 반면, 2017년에는 진보 쪽에 더 많은 게 확인하다. 11점 척도의 진보-보수를 진보(0~4), 중

도(5), 보수(6~10)로 재분류할 경우, 보수가 2007년에는 43.9%였고, 2012년에도 41.9%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26.7%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림 4〉 유권자의 이념분포 (2012 vs. 2017)

자료: KEPS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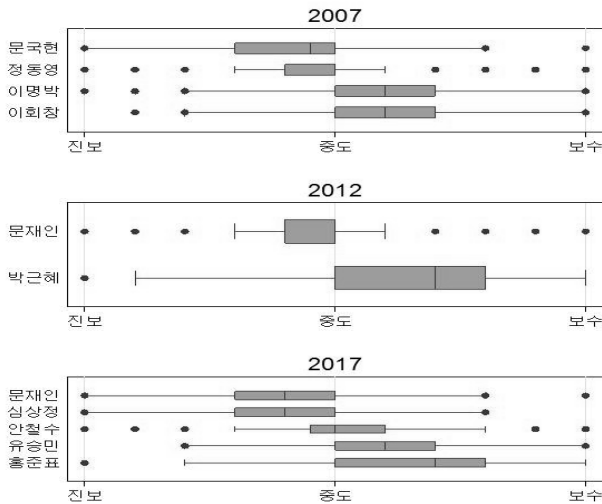
지역과 이념·세대는 각기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투표선택의 경로에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그림 5>는 투표선택, 지지정당, 출신지, 연령대 등 각 집단별 이념의 분포를 보여주는 상자그림(boxplot)이다. (1)번의 투표선택별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자 간 이념차이가 커지고 있다. 2007년 선거에서 문국현 지지자의 평균이념이 4.36이고, 정동영 4.61, 이명박 5.96, 이회창 6.22로 나타난다. 2012년의 경우, 문재인 4.50, 박근혜 6.63이고, 2017년에는 문재인 4.00, 심상정 4.11, 안철수 5.09, 유승민 5.65, 홍준표 6.88이다. 1, 2위를 다투는 양대 정당의 후보 간 이념 차이를 보면, 1.35('07년) → 2.13('12년) → 2.88('17년)로 점차 벌어지는 양상이며, 후보가 많아지면서 이념에 따른 정렬도 분명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2)번의 지지정당별로 보더라도 이념 차이가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2007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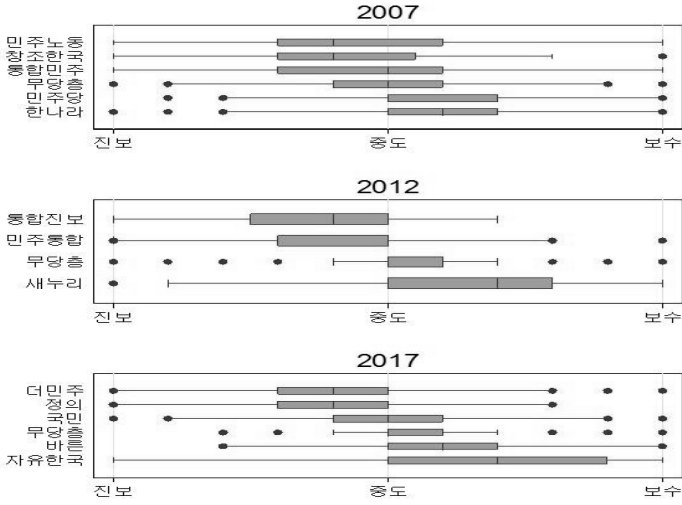
는 가장 진보적인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평균이념이 4.38이고 가장 보수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는 6.12였지만, 2017년의 경우, 정의당이 3.96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7.22이다. 좌우간 양극의 거리가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3)번의 출신지별 이념분포를 보자. 앞서 언급한 ‘순수한 지역주의’는 출신지별 이념의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2007년 광주·전라가 4.90이고 대구·경북이 5.77인 반면, 2017년에는 광주·전라가 4.45이고 대구경북은 5.50이다. 부산·경남의 경우 2007년, 2012년에는 대구·경북과 이념적 동조성이 보이지만, 2017년에는 중도(5점) 아래인 진보 쪽으로 더 많이 분포해 있다. 지역별 편차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1)·(2)에 나타난 다른 집단별 분포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아니다. (4)번의 연령대별 이념분포는 일관되게 노년으로 갈수록 보수적으로 드러나며,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젊은 층이 진보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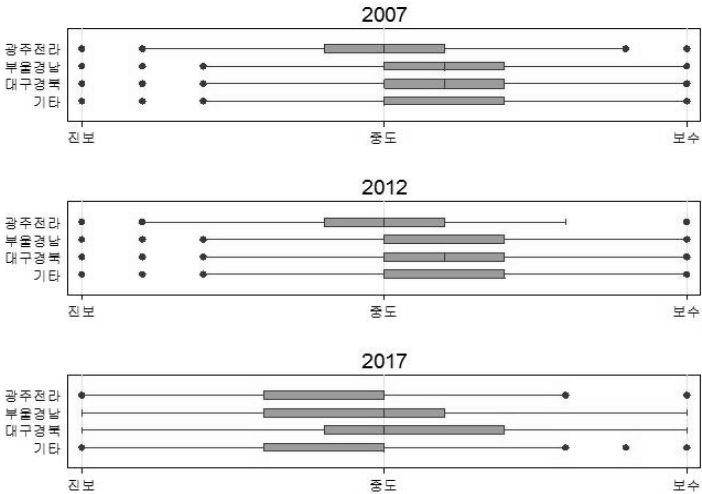
(1) 투표선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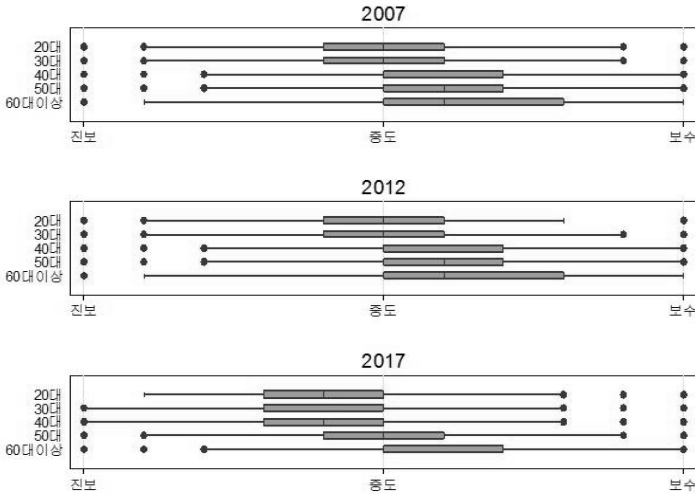
(2) 지지정당별



(3) 출신지별



(4) 연령대별



〈그림 5〉 각 집단별 이념 분포

주: 주관적 이념은 매우 진보(0)-매우 보수(10)의 11점 척도
 자료: KEPS 2007, 2012, 2017

종합하면, 지난 10년간 투표선택이나 지지정당과 이념 사이의 상관관계가 점차 강해져 왔지만, 세대 간, 지역민 간 이념차이는 별로 커지지 않았고 구성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념이 출신지 및 세대와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선거 상황에 따른 시대효과(period effect)를 반영하며, 집단 간 차이에 큰 변화는 없다. 반면 이념은 투표와 당파적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 왔다.

IV. 자료 분석

우리의 관심사인 ‘지역주의 투표’는 지역 외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제외한 나머지이다. 가령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갖고 있어서 진보성향의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이념투표를 제외하고 남는 것이 ‘지역주의 투표’이다. 그 밖에 계층이나 소득, 학력 등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유지되는 지역(출신지)의 영향력을 봐야 한다. 이러한 분석들은 대체로 특정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자료분석을 통해 앞선 선거에 비해 지역의 영향력이 줄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곤 해 왔다. 줄어든 경우에 각 지역 내에서 이념이나 세대에 따라 투표선택의 차이가 나타나면 이를 통해 지역균열을 대체할 요인으로 이념과 세대를 주목하였다.

대표적으로 최준영·조진만(2005)은 2004년 치러진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자료분석을 통해 보수정당 후보 선택(로짓분석)에 있어서 지역변수뿐 아니라 이념과 세대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내에서도 이념과 세대에 따라 투표선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발견은 16대 총선 분석결과와 매우 상이하므로, 지역균열이 와해될 조짐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김희민·최준영·조진만(Kim et al. 2008)도 같은 16대, 17대 총선을 분석하되 보수-진보 간 이항대립이 아니라 각 정당 간 경쟁으로 접근하여 다항로짓 분석을 도입했고, 지역, 이념, 세대의 변화에 따른 각 정당에 대한 투표확률을 구하여 두 선거 간에 이념과 세대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준영(2008)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다항로짓 방법으로 분석하여 16대 대선에 비해 세대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이념의 영향력도 확인은 되나 종전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지역과 이념·세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사와 일치한다. 광주·전라지역에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있고, 이들은 보수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 광주·전라지역에도 노년층이 있으며 다른 노년층의 투표행태와 비슷하게 보수성향을 표출할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도 이러한 경향성을 몇몇 사례에서 발견했고, 그로부터 지역주의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들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는 모형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지역, 이념, 세대를 각기 독립적으로 독립변수로 포함하고, 특정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다른 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즉, 지역·이념·세대 간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짓을 포함한 비선형 모형(nonlinear models)은 선형모형과 달리 모형의 특성상(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아도) 독립변수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가령 x_1 이 $P(y)$ 에 미치는 영향력은 x_2 값 각각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정치연구에서 투표등록제도의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저학력 계층의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월핑거와 로젠스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의 고전적 주장에 대해 네이글러(Nagler 1991)는 로짓모형 자체에서 비롯된 통계적 인공물(statistical artifact)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종속변수가 0과 1의 범위 안에 있고, x , $P(y)$ 사이가 S형 관계이므로, x 계수값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은 전체의 평균에 불과하고, x 값 각각마다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달라진다. y 값의 양극단으로 갈수록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P(y)$ 의 변화량은 미미해진다. 다른 한편, x 의 중간값 부근에서 x 의 변화에 따른 $P(y)$ 의 변화량은 많아진다. 그러므로 로짓모형 분석에서 x 의 계수값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관심사를 충족하기 어렵다. 다른 독립변수와 관심변수의 값을 특정하여 각각의 효과를 관찰해야만 한다(Hanmer and Kalkan 2013).

비선형모형에서 독립변수의 양극단에서 $P(y)$ 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을 압축효과(compression effect)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 통계적 인공물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Berry et al. 2010; Greene 2010). 즉,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고도 상호작용의 발생을 관찰하고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료생성과정(data generation process)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독립변수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베리와 그의 동료들은(Berry et al. 2010, 263)은 앞서 월핑거와 로젠스톤의 분석에 대해서 투표등록제도의 완화가 가져올 효용변화가 모든 학력층에 걸쳐 동일하다면, 상호작용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고학력층은 이미 투표율이 높으므로 제도변화에 따른 투표율 변화가 미미하지만, 저학력층은 투표율이 낮으므로 제도변화에 반응하게 된다. 반대로 네이글러의 가정은 등록제도 변화에 따른 효용증감이 학력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⁵⁾

우리의 분석에 있어서도 지역주의가 이념과 세대에 의해 침식된다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지역균열을 전제할 때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신세대 사이에서는 지역감정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정당경쟁의 지속과정에서 이념에 따른 갈등이 강화되면 출신지역이 어디든 이념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세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즉, 지역주의와 이념·세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의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선의 양자대결에 대한 로짓분석에 있어서 지역주의와 이념·세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추정을 해야만 한다.

로짓모형의 상호작용 효과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모형추정을 통해 확인된 상호작용항의 계숫값만으로는 실질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로짓의 연결함수(link function)를 Φ 라고 하고, x_1 과 x_2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관심 갖는 기댓값 E 는 다음과 같다.

$$E[y|x_1, x_2, X] = \Phi(\beta_1 x_1 + \beta_2 x_2 + \beta_{12} x_1 x_2 + X\beta) = \Phi(\cdot)$$

5) 이에 대한 반론은 Rainey 2016, Mize 2019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압축효과는 분석결과를 오도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데 따른 분석적 손실은 자유도 증가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여기에 편미분을 하여 x_{12} 의 계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2 \Phi(\cdot)}{\partial x_1 \partial x_2} = \beta_{12} \Phi'(\cdot) + (\beta_1 + \beta_{12} x_2)(\beta_2 + \beta_{12} x_1) \Phi''(\cdot)$$

모형추정을 통해 구한 β_{12} 가 0이라 하더라도 β_1 과 β_2 의 값에 따라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나타날 수 있다(Ai and Norton 2003). 그러므로, 관심변수들의 상호작용을 보려면 각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다른 변수의 변화를 관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그림으로 살펴봐야 한다(Mize 2019).

로짓분석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우선 우리는 17대, 18대, 19대 대선을 보수와 진보 후보 간 양자대결로 간주하여 모두 같은 모형을 통해서 추정한다. 이어서 관심변수인 지역주의와 이념·세대의 상호작용에 대해 도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로짓분석의 종속변수는 진보성향 후보선택인 이항변수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이면 1, 이명박이면 0, 18대 대선에서 문재인이면 1, 박근혜이면 0,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이면 1, 홍준표·유승민이면 0으로 조작화하였다.⁶⁾ 독립변수는 출신지역을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그리고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고, 기준점(base)은 기타지역이다. 이념은 모형 설정에 있어서는 0(진보)~10(보수)의 11점 척도를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소득은 0(100만원 미만)~11(1,000만 원 이상)까지로 측정되었고 연속형 변수로 간주했다. 학력은 1(중졸이하)~4(대학원졸 이상)의 4점 척도를 마찬가지로 연속형 변수로 취급하였다.

<표 1>은 로짓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1)~(3)번을 보면, 2007년의 경우 지역주의 투표가 확연하지만, 이후 광주·전라 지역에서

6) 19대 대선의 경우 안철수를 어디에 포함하느냐가 고민거리인데, 진보와 보수 양쪽 어디에 붙이더라도 분석결과에는 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유지된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대구·경북 출신자 변수도 계수값이 작아지고 있다. 연령의 효과는 2012년에 가장 컸고, 이념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가해 왔다. 소득은 2007년의 경우에만 고소득층일수록 정동영 후보 지지할 확률이 낮았다. 학력은 2007년에는 고학력층일수록 정동영을 덜 지지했지만, 2012년과 2017년에는 문재인을 더 많이 지지했다. 2007년과 2012년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수성향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지만, 2017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4)~(6)번 모형을 보면, 출신지 구성항(component term)의 영향력이 모두 사라졌고, 연령과 이념의 계수가 변했으며, 일부 상호작용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된다. 하지만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⁷⁾ 우리는 세 변수 간 상호작용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4)~(6) 모형을 그대로 추정하되 이념을 진보, 중도, 보수의 3가지로 재분류하여 지역별로 이념과 세대의 변화에 따른 진보성향 후보 지지확률을 시각화하였다.

<그림 6>에서 진보, 중도, 보수를 뜻하는 각각의 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세대효과가 큰 것이고, 선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면 이념효과가 큰 것이다. 2007년의 경우, 광주·전라 지역에서 세대효과가 뚜렷한 반면, 영남 쪽에서는 선이 거의 수평에 가까워 세대별 투표행태의 차이는 미미하다. 대신 영남의 진보와 보수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구·경북의 같은 40세라 하더라도 진보성향이면 정동영 투표확률이 36%에 달하지만, 보수라면 2.7%에 불과하다. 광주·전라지역에서 진보나 보수의 투표성향은 거의 비슷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 투표성향이 약간 강해진다.

7) 본래 로짓분석의 계수값은 오즈비(Odds Ratio)의 로그값을 의미하므로, 그 자체를 해석하는 데 애로가 따른다.

〈표 1〉모형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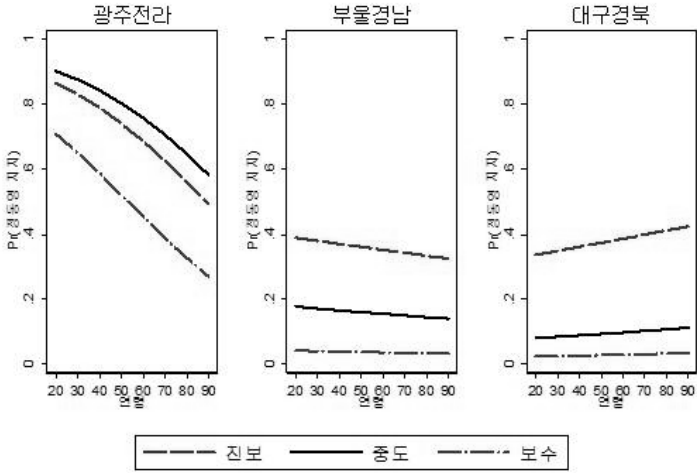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1) 2007	(2) 2012	(3) 2017	(4) 2007	(5) 2012	(6) 2017
광주·전라	2.223*** (0.170)	1.731*** (0.223)	2.314*** (0.406)	1.011 (0.723)	-0.104 (1.035)	-0.341 (1.702)
부·울·경남	-0.660*** (0.233)	0.002 (0.202)	-0.314 (0.263)	-1.015 (1.002)	0.899 (1.072)	0.129 (1.292)
대구·경북	-0.934*** (0.234)	-0.608*** (0.209)	-0.467* (0.263)	-0.784 (1.035)	-0.402 (1.100)	1.949 (1.707)
연령	-0.032*** (0.00620)	-0.044*** (0.00615)	-0.039*** (0.00781)	-0.044*** (0.00810)	-0.036*** (0.00803)	-0.037*** (0.00985)
이념	-0.329*** (0.0386)	-0.582*** (0.0470)	-0.683*** (0.0627)	-0.294*** (0.0516)	-0.675*** (0.0702)	-0.686*** (0.0860)
연령X광주·전라				0.0219 (0.0135)	0.002 (0.0157)	-0.002 (0.0265)
연령X부·울·경남				0.0340* (0.0180)	-0.030* (0.0177)	0.002 (0.0202)
연령X대구·경북				0.0346* (0.0192)	-0.021 (0.0171)	-0.006 (0.0215)
이념X광주·전라				0.047 (0.0911)	0.302** (0.121)	0.470*** (0.180)
이념X부·울·경남				-0.216 (0.133)	0.083 (0.135)	-0.106 (0.178)
이념X대구·경북				-0.327** (0.153)	0.135 (0.138)	-0.397 (0.243)
소득	-0.084** (0.0390)	-0.00813 (0.0355)	-0.048 (0.0437)	-0.078** (0.0390)	-0.006 (0.0359)	-0.0581 (0.0445)
학력	-0.224** (0.113)	0.186** (0.0785)	0.214* (0.111)	-0.203* (0.115)	0.181** (0.0792)	0.247** (0.114)
여성	-0.244* (0.143)	-0.301** (0.148)	0.100 (0.198)	-0.245* (0.144)	-0.304** (0.149)	0.0874 (0.202)
상수항	2.921*** (0.533)	4.578*** (0.519)	5.603*** (0.712)	3.166*** (0.589)	4.756*** (0.613)	5.511*** (0.824)

Pseudo R ²	0.2707	0.2985	0.347	0.2794	0.3081	0.3598
Correctly Classified	80.49%	76.34%	84.19%	80.15%	76.99%	84.07%
Area under ROC	0.836	0.8463	0.8708	0.8415	0.8495	0.8721
관측값	1,466	1,217	841	1,466	1,217	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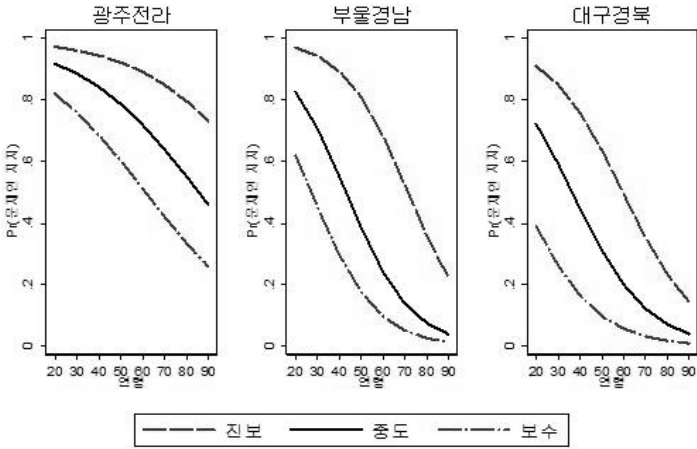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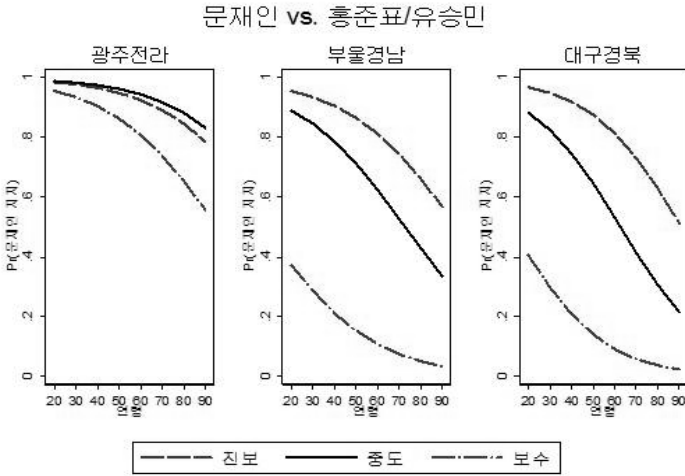
2012년 들어 광주·전라지역에서 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이념투표가 활성화됐으며, 연령에 따라 기울기의 차이도 나타난다. 광주·전라의 진보는 나이가 들어도 진보적인 투표성향을 유지하지만, 보수는 연령효과가 뚜렷하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는 5년 전에 비해 세대효과가 매우 뚜렷해졌다. 부산·울산·경남의 20세 중도성향 유권자는 문재인을 선택할 확률이 82.6%에 달하지만, 같은 이념성향이더라도 60세는 24.1%만이 문재인을 지지했다. 같은 지역 보수성향 유권자는 20세가 62.0%, 60세는 9.8%의 확률로 문재인을 지지해서, 젊은 층이 노년층에 비해 6배가 넘는다. 대구·경북도 상당한 세대효과가 나타나고 동시에 젊은 층에서 나타난 이념격차가 주목할 만하다. 대구·경북 출신 20세 유권자 가운데, 진보는 문재인 지지확률이 91.1%에 달하는 반면, 보수는 39.0%에 불과하다. 대구·경북에서는 부산·울산·경남에 비해 선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념에 따른 투표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정동영 vs. 이명박



문재인 vs. 박근혜





<그림 6> 출신지역별 이념과 세대의 한계효과

2017년에는 영남지역에서 이념투표의 경향이 한결 확연해진 한편, 세대효과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부산·울산·경남의 40세 진보 유권자는 문재인 지지확률이 90.6%이고, 보수 유권자는 21.2%이다. 4.3배에 이르는 차이이다. 대구·경북에서도 각기 91.9%, 20.9%로 양상이 비슷하다. 반면, 광주·전라 출신자들 사이에서는 이념에 따른 투표선택의 차이가 종전에 비해 줄었을 뿐 아니라 세대효과도 작아졌다. 진보와 중도에 비해 보수에서 세대투표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는 <그림 1>에 나타난 역대 선거의 집합적 결과에 근거하여 영남지역주의의 블럭에서 부산·울산·경남이 이탈하는지 여부를 모형분석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이념, 세대, 계층 등 여타의 설명요인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지역주의’를 보았을 때, 부산·울산·경남은 2012년 대선에서 (대구·경북에 비해) 문재인을 좀 더 지지하는 성향이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투표 패턴은 대구·경북과

비슷하다. 2012년에 세대투표 경향이 강해졌고, 2017년에 이념투표 경향이 강해졌다. 부산·울산·경남이 민주화 과정과 3당 합당 이전에 ‘야도’로 자리잡았다는 사실과 해당 지역 민주화 운동을 대변하는 노무현, 문재인이 부상으로 영남의 보수블럭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진단이 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영남 내부의 지역 간 이질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강원택(2012)이 전개하는 논리대로 민주화 이후 <민주 vs. 반민주> 구도가 소멸하고 지역주의가 자리잡았고, 3당 합당 이후 비로소 <진보 vs. 보수>의 대결구도가 형성됐다는 주장과 부합한다. 즉, 지역구도와 이념구도가 중첩된 것이다.⁸⁾ 말하자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민주화 이전과 민주주의 초기의 <민주 vs. 반민주> 구도에서 야권의 일부였다는 사실보다 3당 합당 이후 영남 보수블럭의 한 축이라는 사실이 더 강한 구속력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분석에서 나타나다시피 영남 전체적으로 세대교체와 이념적 분화로 인해 지역주의의 이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영남 보수블럭’ 자체에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V. 결론

우리는 이제까지 지역주의의 의미에 대해 규정하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치러진 3번의 대선 자료를 활용하여 이념과 세대가 지역주의와 빚어내는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지역주의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념과 세대요인의 부상을 주목했지만,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지 않거나, 상호작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 우리는 대안적인 로짓모형 설정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대선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집합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영남지역주의 내부의 균열에 대해 개인자료를 통해서 검증해 보았다.

부산·울산·경남은 대구·경북에 비해 진보성향 후보에 대해 좀 더 지지하

8) 사실 이것은 강원택(2002)의 종전 주장과 상반되는 논리적 귀결이다.

는 경향이 있지만, 이념투표나 세대투표의 경향은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에 영남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이념성향간 투표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왔다. 영남지역에서 세대 간 투표선택의 차이가 2012년에 크게 강화되었지만, 2017년에는 일정정도 완화되었다. 호남에서는 이념에 따른 투표가 덜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2017년에 들어서는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본 논문은 가장 근사한 자료를 통해 같은 성격의 선거에 대해 같은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주의의 변화는 세대교체와 이념에 따른 투표행태로부터 비롯한다는 사실을 담아내기 위해 상호작용 모형을 도입하여 각 요인 간의 역동적인 길항관계를 보여주었다.

집합적 투표결과로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안에는 이념이나 정책적 입장 차이에서 기인하는 합리적인 투표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수한 지역주의’)이 있는 한편, 지역의 물질적 혜택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도 없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와 다른 지역의 배제에서 유래한 것이기에 그 자체가 이념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여 (순수하게) 지역주의로만 설명되는 투표선택의 메커니즘을 드러내기 위해 대통령 선거끼리 비교했지만, 다른 선거에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없는 것도 아니기에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거주지와 출신지 중 어느 것이 지역주의 분석의 적절한 단위인지에 대해서도 설문자료 분석을 통해서만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거주지/출신지의 수많은 조합을 1,000여명 정도의 응답자를 통해서 나눠보기는 어렵다. 대안적으로 대량의 집계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주택인구총조사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작은 지역단위로 출신지 분포를 활용하여 투표선택을 가려내는 작업은 정치지리학적 차원에서 중요한 발견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16대 총선: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의 중첩?”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4: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강원택. 2008. “지역주의는 변화했을까.” 이현우, 권혁용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년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강원택. 2012.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한국정당학회보』. 11권 1호: 171-193.
- 문우진. 2005. “지역본위투표와 합리적 선택이론: 공간모형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50호: 81-112.
- 문우진. 2009.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17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권 1호: 87-113.
- 문우진. 2016. “한국 선거경쟁에 있어서 이념 갈등의 지속과 변화: 15대 대선 이후 통합자료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5권 3호: 37-60.
- 문우진. 2017. “지역주의 투표의 특성과 변화: 이론적 쟁점과 경험분석.” 『의정연구』. 50호: 81-112.
- 박상훈. 2009. 『만들어진 현실』. 서울: 후마니타스.
- 백준기·조정관·조성대.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그리고 2002년 대통령 선거.” 『국가전략』. 9권 4호: 139-168.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이갑윤. 2002. “지역주의의 정치적 방향과 태도.”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2호: 155-178.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75-394.
- 최준영.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지역균열.” 『21세기정치학회보』. 18권 3호: 47-63.

- Ai, Chunrong, and Edward C. Norton. 2003. "Interaction terms in logit and probit models." *Economics Letters* 80(1): 123-129.
- Beasley, Ryan K. and Mark R. Joslyn. 2001. "Cognitive Dissonance and Post-Decision Attitude Change in Six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Psychology* 22(3): 521-540.
- Berry, William D., Jacqueline HR DeMeritt, and Justin Esarey. 2010. "Testing for Interaction in Binary Logit and Probit Models: Is a Product Term Essenti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1): 248-266.
- Greene, William. 2010. "Testing hypotheses about interaction terms in nonlinear models." *Economics Letters* 107(2): 291-296.
- Hanmer, Michael J., and Kerem Ozan Kalkan. 2013. "Behind the Curve: Clarifying the Best Approach to Calculating Predicted Probabilities and Marginal Effects from Limited Dependent Variable Mod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1): 263-277.
- Kim, HeeMin, Jun Young Choi, and Jinman Cho. 2008. "Changing Cleavage Structure in New Democracies: An Empirical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in Korea." *Electoral Studies* 27(1): 136-150.
- Kwon, Keedon 2004, "Regionalism in South Korea: Its Origins and Role in Her Democratization." *Politics and Society* 32(4) 545-574.
- Mize, Trenton D. 2019. "Best Practices for Estimating, Interpreting, and Presenting Nonlinear Interaction Effects." *Sociological Science* 6: 81-117.
- Moon, Woojin. 2005. "Decomposition of Regional Voting in South Korea: Ideological Conflicts and Regional Interests." *Party Politics* 11(5): 579-599.
- Nagler, Jonathan. 1991. "The Effect of Registration Laws and Education on US Voter Turnou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4): 1393-1405.
- Rainey, Carlisle. 2016. "Compression and Conditional Effects: A Product Term is Essential When Using Logistic Regression to Test for Interaction."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4(3): 621-639.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19.07.01.	심사일: 2019.07.19.	게재확정일: 2019.07.22.
------------------	------------------	--------------------

Changing Regional Voting Behavior of Korean Voters

Hur, Suk Jae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e examine the change of regional voting behavior during the last three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Regarding regional voting cleavage as identity politics rather than material or economic voting, presidential elections are better to analyze than others such as National Assembly or local elections, in that nationwide winner-take-all structure of presidential competition brings only two viable candidates into the electoral scene. Using logit model, we compare interactions among regional, ideological, and cohort voting. The results show that young voters from Youngnam are more progressive and more likely to vote progressive candidates. Ideological voting was particularly salient in 2017 election, especially among Youngnam people. To the contrary, Honam voters have little divide along the cohort membership and attest much smaller difference between ideological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

Key Words | Regional voting, Left-right ideology, Cohort effect, Interaction model.